데스크시각

지방분권이 핵심이다

장 필 수
전남본부장

흔히 1987년 6월 항쟁이 이룬 결과물로 '민주화'를 꼽는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최루탄 가스를 마셔 가면서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요원했을 것이란 의미에서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6월 항쟁의 직접적인 성과는 헌법개정(개헌)을 이끌어 냈다는 데 있다.

1987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끄떡도 하지 않았다. 4월 13일엔 '개헌 논의는 국력 낭비'라는 이유로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내림으로써 국민들의 여망을 깔아뭉갤 정도였다. 하지만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박종철 사건 은폐 조작 폭로와 6월9일 연세대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사망하면서 6월 항쟁의 불꽃이 타올랐다. 급기야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해 개헌안이 마련됐고 국민투표를 거쳐 5년 단임으로 바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됐다. 신군부가 6·29 선언과 동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하는 '신의 한 수'(?)로 야권 분열을 이끌어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당선을 이끌었지만 6월 항쟁은 개헌이란 성과물을 남겼다.

30년 만에 개헌 논의 활발

당시에는 독재 타도를 위한 호헌 철폐가 급선무였던 만큼 개헌에 다른 내용을 담을 여유가 없었다. 이 때문에 87년 개헌을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개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이 흐른 지금,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제왕적인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을 국민 모두 절감했다. 이런 맥락에서 5년 단임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새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1월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 개헌은 논의의 중심이 정치에서 민생으로 옮겨 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 직선제 및 임기만 다룬 87년과 달리 이번에는 논의할 의제가 다양하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할 것인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것인지 등 정치적 이슈만 해도 넘쳐난다. 여기에 5·18을 비롯한 민주화 정신 반영, 고용·노동·복지에서의 성평등 등 국민 기본권 보장 요구가 있다. 지방분권 정신도 개헌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의제다.

지역민들 삶의 질 높여야

문제는 의제가 많다 보니 지방분권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수도권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 중임제 등 정치 이슈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정 목표 중 하나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지방분권에 힘을 실었다.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하고 2019년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인 지방분권 정책 중 하나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의 공감대 형성일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가 나서 각계 전문가들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방향과 개헌에 담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보와 재정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제부터는 개헌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 중에서도 지방분권 문제를 개헌의 중요 이슈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었는데도 인구와 경제력은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 보면 개헌의 중심이 지방분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해진다. 2018년 개헌이 정치가 아닌 민생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것처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제대로 이뤄질 때 가능하다. /bungy@kwangju.co.kr

기 고

한전공대 입지, 나무 아닌 숲을 보고 결정해야

강 인 규
나주시장

공약(公約)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선출직 공무원에 진출하려는 사람이 정해진 임기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 실행할 것을 의사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정부와 국민 내지 주민과의 계약을 의미한다고 본다.

공적 계약이든 사적 계약이든 이행을 전제로 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최소한 정치적 강제가 담보돼 있다. 그래서 공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을 전제로 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혁신도시를 방문해 혁신도시 시즌 Ⅱ로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주시민께 약속한 바 있다.

또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전, 제4차 산업에 대비한 에너지 인력양성을 위한 한전공대 건립 등을 나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지난 6월 한전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밸리 조성 정책간담회에서 에너지밸리 성공조건은 우수 인력 공급에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당 차원에서 한전공대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이런 공약들이 포함됐다. 일차적으로 유권자에게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다만 에너지밸리 조성과 한전공대 설립이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반영돼 향후 대학의 입지를 놓고 시·도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기에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대선 공약과 관련, 과거 정부에서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대구와 경상북도의 숙원이었던 대구 신공항건설 사업은 2007년과 2012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치적 부담과 지역갈등 등을 이유로 결국 백지화됐다.

또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김해 신공항 건설도 사실상 신공항 건설이 아닌 기존 공항을 확대개념으로 축소됐다. 이같은 사례에서 나타나듯 대통령의 공약이 기본적인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좌초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역 간 갈등이다. 특히 한전공대 건립이나 공항건설 사업처럼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난날의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한전공대는 충청권에 카이스트, 영남권의 포항공대와 삼각 축을 이루면서 미래 국가발전의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시장으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입지와 관련해 나름의 대전제를 제시한다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에 한전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기에 한전공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에너지밸리연구개발센터가 있기에 한전공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에너지가 급부상하게 된 점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런 방향이라면 한전공대는 이들 기관과 가까운 권역 내에서 상호보완 관계를 가지고 운영될 때 각 기관에서 느끼는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리고 나주시는 10여 년 전인 혁신도시 유치 당시부터 한전공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런 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전남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하고 한전공대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한전공대의 입지가 결정되었으면 한다. 한전공대의 입지가 미래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면 갈등은 피하기 힘들다. 결국, 한전공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혁신도시의 미래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지역 대학에서는 한전공대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듣고 있다. 지역 대학들과 한전공대는 경쟁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한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겠지만 지역대학과 상생 문제에 대해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본다.

한전공대를 두고 '나주가 적지냐, 광주가 적지냐'는 논쟁보다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세계적 인재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한전공대가 어디에 들어서야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도민의 의사가 모아졌으면 한다.

은펜칼럼

고령사회의 독서는 스토리텔링으로

심 명 섭
효령노인복지타운 도서관장

인간 수명 100세 시대!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고령화사회 문제이다. 이제 나라마다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층이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층의 증가가 경제·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6년에는 20.8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이미 과거 효(孝)를 중시하던 대가족 사회로부터 핵가족화 내지는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했는데 노후 대책에 소홀한 노인들은 앞길이 불안하고 걱정이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이다. 100세 시대 60대에 퇴직을 하고 어떠한 사회적 활동도 하지 않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는 것만을 낙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의 여가 시간 문제, 경제 문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대되는 역할 문제 등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 기술, 방법 등에 대해 끊임없는 탐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안한 그들의 삶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많겠지만 우선적으로 노인 교육을 통해 그들의 인식 개선과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인 교육이란 단순히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노인 교육의 올바른 정의는 노인과 노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적 노력의 실천 과정'을 가리킨다. 즉 생활화의 원리이다.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학습 효과가 증진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노후의 생활을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계속적인 발달을 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습하길 원한다.

이러한 계속적인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독서이다. 독서는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독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은 같을 것이다. 이는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며 인간만이 가능한 지적 활동이다. 노년기의 독서는 노인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서도 독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독서가 노인들에게 유용하다 하더라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더 나아가 독서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독서 활동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독서에 흥미를 가지고 독서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가질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이 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의미는 '이야기하다'라는 뜻으로 흔히 '구연'을 의미하며 '동화, 야담, 만담 따위를 여러 사람 앞에서 말로써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반추해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스토리텔링에 의해 양육되고 교육되어 왔다. 어머니의 자장가를 듣고,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를 통해 삶의 정보를 하나씩 터득해 왔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수받으며 자신의 삶 역시 이야기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토리텔링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인류가 등장한 이래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즉 우리 삶을 규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인생의 후반기를 걷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정치·철학·사상·역사 등의 차원 높은 학문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제격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야기 속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감정이입은 물론 오감을 통한 대리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지식의 전달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공무원 초과근무 줄여 '일자리 나눔' 동참을

광주·전남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가 여전히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대 민생 현안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잔업과 초과근무를 줄여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은 35억7700만 원에 달했다. 매월 평균 1130명이 모두 5억93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전남도는 이 기간 55억9600만 원을 지급했고 매월 2045명이 30시간분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다. 이는 시·도 본청과 사업소만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 시·군·구를 포함한 29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2만790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초과근무 수당 지급액은 연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면서 야근을 하지 않고 초과근무 수당만 챙기는 '얌체 야근족'은 많이 사라졌지만 개선해야 할 점은 여전히 많은 듯하다. 전남도의 한 공직자는 최근 노조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근무시간을 어학 공부, 인터넷 서핑, 지나친 사적 통화, 재테크 등으로 보내고 유독 저녁에만 일이 있다고 초과근무를 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초과근무가 1년 내내 일반화하는 것이다. 낮 시간대 업무능률과 집중도를 높여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손 부족이 문제라면 인력 재조정이나 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일자리가 화두인 시대에 공직사회부터 초과근무를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광주·전남 지자체의 초과근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면 연간 500억 원 안팎의 수당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단순 계산하면 연봉 5천만 원 짜리 일자리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 아닌가.

광주가 전국관광지도에서 사라진 까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가 관광지도에서 사라졌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국 '100대 관광지'에 광주의 그 어떤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다. 관광객들이 생각하기에 광주는 볼거리도 없고 살 거리도 마땅치 않은, 관광하기에 애매한 곳인 셈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6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전국 100대 유명 관광지에 광주의 조사대상 관광지점 44곳 중 그 어느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관광지점은 입장권을 받거나 관광객 수 집계 장치가 있는 곳으로, 집계 수치는 정부 관광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광주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국립광주과학관(66만 6502명)이었으며 국립광주박물관(54만 2182명)·광주시립민속박물관(12만 5333명)·'이장우 가옥' 등 양림동 일대(7만 1021명) 등의 순으로 관광객이 몰렸으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광주 대표 관광지인 무등산 국립공원 관광객은 307만 3342명으로 순위를 매기면 12위에 해당하지만, 관광지점이 원효사·증심사 등 26곳으로 분산되는 바람에 10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에 비해 전남은 여수·순천에만 1300여만 명이 다녀가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순천은 '국가정원·습지' 방문객이 543만 명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여수 엑스포해양공원(11위·307만)·오동도(15위·280만)·돌산공원(17위·247만 명)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광주도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광주 관광상품'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문화전당과 5·18묘지를 중심으로 한 '5·18 시티투어'와 5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수·순천 등 전남 관광객과 제주 관광객을 광주로 유인할 프로그램 개발과 면세점·숙박시설 확보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다뉴브의 진주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다뉴브(Danube)강을 한번쯤 들렀을 것이다. 다뉴브강은 독일 남서부에서 발원해 9개국을 거쳐 흑해로 흘러드는 동서 유럽을 잇는 '동맥'이자 '젖줄'이다. 독일어로는 도나우(Donau), 헝가리어로는 두나(Duna), 체코어로는 두나이(Dunaj)다. 우리에게는 영어식 표현인 다뉴브(Danube)로 더 알려졌다.

서유럽과 중유럽 및 동유럽을 연결하는 다뉴브강의 중심에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가 있다. 19세기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나눠진 부다(Buda)와 페스트(Pest) 지구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도시다.

수려한 도시경관으로도 유명한 부다페스트는 파리·프라하와 함께 유럽 3대 야경으로 손꼽힌다. 그래서인지 부다페스트를 '다뉴브의 진주' '동유럽의 장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곳에서 지금 지구촌 수영 축제인 제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마스터스대회가 열리고 있다. 총 182개국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해 다뉴브강 인근 경기장에서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2년 뒤인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만큼 엊그제 현장 취재를 다녀왔다. 놀라웠던 점은 헝가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개막식은 메인 경기장이 아닌 부다페스트 도심을 흐르는 다뉴브 강변에서 열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다 왕궁과 어부의 요새 등 다뉴브 강변 인근의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모두 개막식 무대의 주요 장소였다. 경기장도 마찬가지다. 싱크로나이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웅광장, 하이다이빙은 건너편인 다뉴브강, 수구경기는 수구 유럽챔피언십 경기가 열린 마가렛섬에서 각각 열렸다. 200여 개 국가가 TV로 중계하면서 누적 시청자 수가 수십억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 도시 관광 마케팅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2년 뒤 광주에서 열리는 수영대회를 그처럼 치를 수는 없는 것일까. 하지만 딱히 전 세계에 내놓을 유명 관광명소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